

행정학: 최옥진 해설

| 출제영역 | 빈도 | 문제번호 | 어려운 문제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|
| 총론 | 3 | 1,4,7 | . |
| 정책학 | 2 | 3,5 | . |
| 조직론 | 2 | 2,19 | . |
| 인사행정 | 4 | 12,14,15,20 | 12 |
| 재무행정 | 2 | 6,16 | . |
| 지방자치론 | 3 | 9,10,18 | 9,10 |
| 행정환류 | 0 | . | . |
| 기타 제도·법령 | 4 | 8,11,13,17 | . |
| 총평 | ① 우수점수: 85점 이상 ② 기타 제도 및 법령·인사행정 다수 출제 | | |
| 해설지 보는 법 | ① '✓' 표시가 된 것은 낫선 선지 혹은 주제임 ② 해당 표시가 된 선지나 주제는 정리해둘 것 | | |

1.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신공공관리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고, 뉴거버넌스는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강조한다.
- ②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, 뉴거버넌스는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.
-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방향잡기(steering)를 중시하고,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를 중시한다.
- ④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,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 초점을 둔다.

정답 ④
 해설: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,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 초점을 둠
 ①②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내용이 바뀌었음
 ③ 양자 모두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임

2.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아지리스(Argyris)의 성숙·미성숙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욕구, 권력욕구, 친교욕구로 구분한다.
- ② 해크만(Hackman)과 올드햄(Oldham)의 직무특성이론은 핵심적인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, 과업 정체성, 과업 중요성, 자율성, 피드백으로 구분한다.
- ③ 애덤스(Adams)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.
- ④ 포터(Porter)와 로러(Lawler)의 업적·만족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.

정답 ②
 해설: 아래의 표 참고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기술다양성 |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종류 |
| 직무정체성 | 직무내용의 완결성 정도 → 직무의 범위 |
| 직무중요성 | 직무가 조직의 내외 사람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→ 직무의 영향력 |
| * 기술다양성, 직무정체성, 직무중요성은 직무수행자가 느끼는 직무에 대한 의미에 영향을 미침 | |
| 자율성 | 직무수행 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서 직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으로 이어짐 |
| 환류 | 일련의 성과정보로서 직무수행성과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짐 |

- ① 성취욕구, 권력욕구, 친교욕구로 구분 → 매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
- ③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침
- ④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 → 로크의 목표설정이론

3. 사바티어(Sabatier)의 옹호연합모형(Advocacy Coalition Framework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(policy subsystem)에 중점을 두고 있다.
- ② 정책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.
- ③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(policy broker)가 중재한다.
- ④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. ✓

정답 ②
 해설: 정책지지연합모형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을 설명함

- ① 사바티어는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참여자 집단, 즉 정책하위체제(policy subsystem)에 중점을 두고 있음
- ③ 정책을 둘러싼 각 지지연합은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 경쟁하며, 이를 정책중재자(관료 등)가 중재함
- ④ 지지연합모형은 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안정적 요인(정책 문제의 특성, 자원의 기본적인 분포, 법적 구조 등)과 외부역동적 요인(사회·경제적 조건의 변화, 통치집단의 변화)을 제시하고 있음

4.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실제설은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라고 본다.
- ② 과정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.
- ③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원칙의 가치기준을 제공한다.
- ④ 공익은 자유, 형평, 평등과 같이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한다.

정답 ③
 해설: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므로 자원 배분원칙의 가치기준을 제공함
 ① 과정설에 대한 내용임
 ② 실제설에 대한 내용임
 ④ 공익, 정의, 복지, 형평, 평등, 자유는 궁극적 가치임

5.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혼합주사모형에서 ‘문제성 있는 선호(problematic preferences)’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.
- ② 최적모형에서 ‘불명확한 기술’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.
- ③ 쓰레기통모형에서 ‘문제중심의 탐색’이란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.
- ④ 엘리슨 모형(Allison Model)의 ‘합리적 행위자모형(모형 I)’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.

정답 ④
 해설: 엘리슨 모형 중 모형1은 합리모형임 → 따라서 국가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함
 ①②
 문제성 있는 선호, 불명확한 기술, 수시적 참여(간헐적 참여)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임
 ③ 문제중심의 탐색은 회사모형의 특징임

6. 「국가재정법」상 (가)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?

제53조 ((가) 원칙의 예외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(이하 “수입대체경비”라 한다)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.

- ① 예산총계주의
- ② 예산사전의결
- ③ 예산공개성
- ④ 예산기구 상호성

정답 ①
 해설: 아래의 조항 참고
 국가재정법 제53조 【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】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(이하 “수입대체경비”라 한다)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.

7. 사바스(Savas)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요금재는 자연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.
- ② 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.
- ③ 시장재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.
- ④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,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.

정답 ④
 해설: 선지는 공공재에 대한 내용임
 ① 요금재를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규모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음 →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
 ② 집합재(공공재)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
 ③ 시장재는 가치재를 제외하고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임

8.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- ②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.
-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.
- ④ 책임운영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종합평가의 대상이다.

정답 ④
 해설: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이며, 책임운영기관법상 종합평가 대상임
 ① 책임운영기관법 제4조 【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】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 ② 제2조 【정의】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소속책임운영기관: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
 2. 중앙책임운영기관: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청(廳)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
 ③ 동법 제7조 【기관장의 임용】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·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9.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✓
-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.
- ③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정답 ①
 해설: 아래의 표 참고

| | | |
|----|---|---|
| 개념 |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②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이면서 수평적 조정제도 ③ 모두 「지방재정법」에 운영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| |
| 유형 | 자치구 조정교부금 | ① 특별시·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 ②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함 |
| | 시·군 조정교부금 | 도의 산하 시·군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 |
| | 기타 | ① 각각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됨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와 시·군의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총액의 90%를 재원으로 함 ③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원의 10%를 차지하며 자치구와 시·군의 지역개발사업 같은 시책 추진 등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함 |
| 법령 | 지방재정법 제29조의3(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)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. | |

②③④

※ 국고보조금의 유형

| 구분 | 용도 | 관련 법령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장려적 보조금 |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| 지방재정법 제23조 【보조금의 교부】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|
| 부담금 (국고부담금) |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 | 지방재정법 제21조 【부담금과 교부금】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. |
| 교부금 (의무적 위탁금) |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 | 지방재정법 제21조 【부담금과 교부금】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. |

1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✓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. ✓

정답 ④
해설: 아래의 표 참고

| | | |
|----------|---|---|
| 경계 변경 절차 | ① | |
| | ② | |
| | ③ | 지자체가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경계변경에 대한 합의를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|
| 그림 설명 | 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신청 가능 ② 행안부장관은 경계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청 ③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경계변경에 대한 합의를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| |
| 참고 |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 | |

- ①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함
- ②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,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

11. 넛지(Nudge)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한다.
 - ②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한다. ✓
 - ③ 정부의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 선택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.
 - ④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방지한다.

정답 ③
해설: 넛지이론에서 정부는 선택설계자(choice architect) 역할을 수행함 → 즉, 넛지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

- ① 넛지이론은 경제적 유인에 따른 동기부여를 비판하면서 사람의 행동은 은연 중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선호함
- ② 넛지이론은 심리학을 경제학에 적용한 행동경제학에 기반하는바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중시함
- ④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야기함

12.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.
- ㄴ.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 ✓
- ㄷ.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정답 ②
해설:
※ 올바른 선지
ㄱ.
-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·정원, 보수,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총액을 배정하고, 각 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→ 단,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함
- 총액인건비를 한정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야 함 → 예를 들어,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기초함
- 단, 휴일근무수당 등은 시행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
ㄷ.
총액인건비 내에서 재원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등을 부여(성과상여금 등)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할 수 있음
※ 틀린 선지
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: 중앙행정기관, 소속책임운영기관 등

13.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상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를 둔다.
- ㄴ.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✓
- ㄹ.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정답 ④

해설:

※ 올바른 선지

ㄴ.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 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】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ㄷ. 동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정부업무평가”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·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중앙행정기관

나.지방자치단체

다.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

라.공공기관

※ 틀린 선지

ㄱ. 동법 제9조 【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】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.

ㄹ. 동법 제27조 【평가결과보고】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14. 「국가공무원법」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?

- ①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✓
-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정답 ②

해설: 아래의 조항 참고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5. 직무급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.
- ②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수의 원칙을 적용한다.
- ③ 직무급 산정 시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.
- ④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.

정답 ④

해설: 직무급은 일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체계임 →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의 종류를 가늠하는 직무분석과 난이도를 평가하는 직무평가를 거쳐야함

- ①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 → 직능급
- ②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수 → 실적급
- ③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 → 연공급

16.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정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회계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렵다.
- ②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.
- ③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④ 현금의 유입,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.

정답 ①
 해설: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, 고정자산 등을 회계과정에서 인식하기 용이함
 ② 발생주의는 외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인식함
 ③ 발생주의는 자동차, 건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함

17.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관장·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 ✓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. ✓
-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 이상인 공기업이다.
- ④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, 민간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.

정답 ①
 해설: 아래의 조항 참고
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(경영실적 평가)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·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
 ② 지방공기업법 제50조(공동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% 이상인 공기업임
 ④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음

18.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. ✓
- ② 「지방재정법」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.
- ④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✓

정답 ②
 해설: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(지방채의 종류)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지방채증권: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2. 차입금: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 정부·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(현물차관을 포함한다)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③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 4. 지방채의 차환
 ④ 지방재정법 제12조(지방채 발행의 절차)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9. 조직이론 중 ‘조직군 생태학(population ecology)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.
- ②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. ✓
- ③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.
- ④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.

정답 ③
 해설: 조직군 생태론은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임
 ① 조직군 생태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적소에 있으면 생존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됨
 ② 조직의 변화에 대한 내적인 제약요인: 매물비용, 정보의 부족, 굳어진 정치적 구조 및 오래된 조직역사 등
 ④ 조직군 생태론의 주요 분석단위는 조직군임

20.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.
- ②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. ✓
- ③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.
- ④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정답 ②

해설: 아래의 조항 참고

공무원행동강령 제3조 【적용 범위】 이 영은 국가공무원(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지방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에게 적용한다.

※ 참고: 독립기관 행동강령은 각 조직의 규칙으로 정함

① 공무원행동강령은 대통령령임

③

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【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】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

④

공무원행동강령 제1조 【목적】 이 영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